

‘보선 대패’ 흔들리는 국민의힘

국힘 임명직 당직자 사퇴 야당 “꼬리자르기식 회피”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수습에 나서자 민주당은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라며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14일 임명직 당직자가 전원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힘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되도록 면모를 통합형으로 일신하고 민생을 우선으로 하며, 개혁정당으로 발전적 도약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사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다”라며 “법법자를 사면 복권하고 공천을 받게 했던 대통령실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고 논평했다.

이어 권철승 민주당 대변인도 15일 “구태정치적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다”라며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윤 대통령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후보’로 강조했다. 국민을 모독해 놓고 참모들 뒤에 숨어 있나”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로 패전의 책임을 짐승이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짐승 장수가 해선 안될 일이라며 파천황(破天荒)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시장은 ‘용산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 가면서 총선을 치를 훌륭한 분들이 있다. 지금 지도부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들고 나르시’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글을 게재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SNS로 ‘국힘은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의총 한 두 번하고 비책이 나올수 있을까? 임명직 받고 일한 당직자들만 물러났지만 그걸 책임정치라고 할수 있을까’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김 전 의원은 ‘모든 사안들을 당내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사안건인가’라며 ‘신뢰받는 새로운 간판과 메류가 필요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패배 수습과 당 정비를 위해 1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총의를 경청했다.

국힘 의총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 발언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기현 당 대표 사퇴 요구와 같은 강경 발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일부 중진 의원은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국민의힘을 바

로 세워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도중 잠시 마주친 기자들에게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위가 필요하다. 수도권 20~40대 계층을 향한 전략과 정책과 메시지와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본인의 제안을 밝히기도 했다.

야당과 국힘 내에서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의총에서 나온 발언들과는 상관없이 ‘수도권 전진 배치’와 ‘통합 탕평 인사’ 기준은 유지할 것임을 전했다.

홍정운 기자

경인선·수인선 방음벽 개량사업 추진

박찬대·허중식 의원 국가철도공단 협의 철도 주변 환경 개선

경인선·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중식 국회의원들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철도 주변 원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70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선과 수인선 등 철도 주변에 건축허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 상당수가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방음 성능이 저하된 데 따라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두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측과 ‘제4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 중 인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방음벽 10곳(총연장 3600m)에 대해 개량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동암역~간석역(36m) 구간’에 이어 5년 만에 동암

역~간석역~주안역~제물포역 등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 방음벽 개량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울해말 △동암역~간석역(653m) △동인천역~인천역(45m) 등 2곳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다. 이어 △부개역~부평역(240m) △간석역~주안역(1353m) △간석역~주안역(2860m) △주안역~도화역(242m) 등 4곳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석역~주안역(390m) △도화역~제물포역(153m) △도화역~제물포역(2380m)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수인선은 △원인재역~연수역

(803m) 구간에 대해 안전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량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으로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중식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방음벽 개량사업 10곳이 확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유류부지 활용과 함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철도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동수 기자

경기도 맞벌이 가구 증가… 지원 정책 모색

경기도 여성가족교육연구회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 용역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회장 김재균 위원장)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적인 맞벌이 가구 증가 추세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맞벌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입안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목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평택대학교 신승연 교수는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의 배경과 기대효과, 연구 방법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전문가 자문과 사례 분석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인 맞벌이 가구를 직접 면담해 고충 사항과 욕구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김재균 위원장은 착수보고 내용 관련해 “경기도가 도시·농촌·도농복합 등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역 유형에 따른 정책 제안이 상세히 제시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의 정책지원관 및 입법조사관, 그리고 경기도 여성가족고용평등과 실무진도 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 개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여성가족부 변상기 고용평등과장은 “도민을 면담 조사할 때 육구 파악이 가장 중요하며, 직업 유형 및 근로 형태와 연봉 수준별로 육구의 수준과 종류가 다를 수 있어 이를 구분해 파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인창 기자



인천시의회는 인천을 방문한 호놀룰루시의회와 교류를 약속했다.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해외 시의회와 교류 약속

호놀룰루·기타큐슈 시의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 초청

인천시의회가 해외 우호 자매 도시인 호놀룰루시의회 및 기타큐슈시의회와 더욱 돈독한 우애를 다졌다.

1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59회 인천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시의회와 일본 기타큐슈시의회(13~15일)가 인천을 방문했고, 이들 두 도시 시의회는 13일 인천시의회를 각각 공식에 방문했다.

호놀룰루·기타큐슈 시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인천시의회와 교류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됐던 교류 행사도 인천시민의 날 초청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다.

우선 호놀룰루시의회 의장(토미 워터스) 및 의원 대표단 7명은 이번 인천 방문 기간 중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건립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방문했다.

또 이들은 인천시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 및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현지

시찰 활동을 위해 스타트업파크(14일) 및 구월아시아드 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16일)을 찾았다.

그리고 기타큐슈시의회는 의장(다나카 츠네오) 및 대표단 3명이 인천을 찾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 운영센터 등을 두루 돌아보며 정책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인천시의회는 이번 두 도시의 시의회 방문을 계기로 우호 교류 증진 및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민간 협력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두 도시 의장과의 만남에서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은 “하와이 마우이 섬 대형 산불 및 일본의 태풍피해와 같이 전 세계 도시의 공통 이슈인 기후 위기에 대응해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교류가 절실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호놀룰루시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은 지난 하와이 산불에 보내준 인천시의 성금에 감사를 전하며 동의 뜻을 표했다.

인종삼 기자

여의도 소식

‘민폐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김교흥(민주당, 인천서구갑·사진) 의원은 13일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민폐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이 개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칸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거나,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공간을 차지하거나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주차갈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 운전자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민폐 주차와 주차 다툼에 대한 하소연이 나온다. 최근 충남에서는 주차선을 침범한 민폐 주차 차량을



응징하려고 운전석 문 옆에 바짝 주차했다가 폭행까지 당하는 피해사례까지 발생했다. 갈등을 유발하는 민폐 주차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른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 2칸 이상을 혼자 차지한 주차, 주차장 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입로를 막는 알박기 주차, 주차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 사람이나 가방을 두고 자리를 잡는 행위가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민폐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신속하게 해소되고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종삼 기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동

안민석 의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동 튀었다.

안민석(민주당, 오산·사진)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40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 적발률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 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종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으나, 지난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올해 2차 정부합동단속에 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김희열 기자

북한 사치품 수입액, 1년 만에 15배 증가

윤상현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국민의힘, 인천동구미추홀구을·사진) 의원은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국경봉쇄 이후 위축됐던 북한의 사치품 수입이 지난해부터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대중 사치품 수입 규모는 △2020년 2283만달러 △2021년 184만달러 △2022년 2851만달러 △2023년 7월 기준 4064만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이 코로나 봉쇄정책을 이어가던 2021년 184만달러였던 사치품 수입액은 1년만인 2022년에 2851만달러를 기



록해 무려 15배나 증가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수입액만도 작년보다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을 금지하고 2017년 12월에는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 산업기계와 운송수단, 금속류 등의 대북수출까지 차단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일본·유럽연합은 대북제재 규정에 적용되는 사치품 목록을 정례해 발표했지만 중국은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수입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동수 기자